

# 대구광역시 서구 가족을 돌보는 저소득 청소년·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대표발의: 김 종 일 의원)

의안 번호	518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4. 2. 8.

발 의 자: 김종일 · 오연환 · 백일권 ·  
이동운 · 이금태 의원

## 1. 제정이유

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면서 장애, 질병, 고령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저소득 청소년·청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·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 등을 규정(안 제1조~제4조)
- 나. 가족돌봄청년 지원계획의 수립(안 제5조)
- 다.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실태조사(안 제6조)
- 라.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(안 제7조)
- 마. 민간전문가 활용 및 관계 기관 협력 등을 규정(제8조~제10조)

## 3. 제정 조례안: 붙임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민법」 제779조
- 「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
-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, 제8조, 제49조

- 「청년기본법」 제3조, 제4조, 제21조
-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4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## 대구광역시 서구 가족을 돌보는 저소득 청소년·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장애, 질병, 고령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저소득 청소년·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과 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가족”이란 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.
2. “저소득 청소년·청년”이란 「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에서 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

**제3조(구청장의 책무)** 대구광역시 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가족을 돌보는 저소득 청소년·청년(이하 “가족돌봄청년”이라 한다)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,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**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5조(지원계획의 수립)**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청년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
2.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
3.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 협력 방안
4. 그 밖에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지원계획은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 따라 매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

**제6조(실태조사)**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청년의 생활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지원 방안 마련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·관리할 수 있다.

**제7조(지원사업)**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
2.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생계 및 의료 지원
3.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지원
4. 가족돌봄청년의 학업 지속을 위한 지원
5.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간병교육
6. 가족돌봄청년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
7. 그 밖에 구청장이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

② 구청장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 1년간 가정 방문, 전화 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.

**제8조(민간전문가 활용)**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·법인·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.

**제9조(관계 기관·단체와의 협력)**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,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.

**제10조(중복 지원의 제한)**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련 법령

### □ 민법

제779조(가족의 범위)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.

1.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
  2.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
-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.

### □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

제2조(지원대상자)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
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한부모가족
3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거 등록된 저소득장애인
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저소득보훈대상자
5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사람
6. 예기치 못한 재해·재난, 사고, 질병, 실직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원이 부족한 사람
7.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

### □ 청소년 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소년”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8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
**제49조(청소년복지의 향상)** ①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·태도·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,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 향상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보장, 직업재활훈련,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·신체적·경제적·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## □ 「청년기본법」

**제3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년”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.

**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,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.

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·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21조(청년 복지증진)**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·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## □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

제14조(위기청소년 특별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·경제적 지원(이하 “특별지원”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

② 특별지원은 생활지원, 학업지원, 의료지원, 직업훈련지원,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. 다만,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.

③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 기준,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